

재개발 비리 수사 지역 사회 쓰나미 덮치나

경찰,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 수사로 지역 술렁 다윈이앤씨·백솔·한솔·재개발조합장 등 9명 입건 문홍식 인맥 얽힌 공무원·경찰·정치인 이름 오르내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 및 분양신청권 특혜 의혹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경험론적 분석이 흘러나오면서다. 경찰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입건하는 사례가 이어지는데다,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오르내리는 인물들도 많아져 지역사회의 술렁임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광주경찰청 전담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입건된 피의자는 16명에 이른다. 붕괴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7명, 나머지 11명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으로 입건되는 등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2명은 2개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경우다. 입건자도 계속 늘어나는 모양새다. 당장, 경찰은

석면철거공사를 맡은 다윈이앤씨 임원 2명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본사인 서울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7대의 하드디스크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문홍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미국 출국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경찰은 공모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단, 경찰은 이들이 이미 드러난 불법 재해도급 외에 철거공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또다른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다윈이앤씨가 맡은 석면 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 뿐 아니라 일반건축물과 지장물 철거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추가 입건도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 외에도 학동 4구역 재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존 광주지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리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 고스란히 확인되다보니 건설업계와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민들을 중심으로 양파 껍질 벗기듯 추가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당장, 빠르게 확산하는 의혹으로는 재개발구역 내 지분조개기를 통한 입주·분양권 특혜 의혹이다. 지분조개기란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조합원 수를 늘리는 수법이다. 부동산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토지를 싸게 산 뒤 비싸게 쪼개 팔아 막대한 이득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확보한 뒤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범법도 최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광주일보 2월 26일 6면) 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당시 몰락지(분양권 없는 현금 청산 대상)였던 게 딱지(주택·상가 우선분양권)가 됐다는 말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학동 3-4구역 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폭력조직 출신 문홍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폭넓은 인맥에 의혹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문 전 회장의 인맥에 얽혀 있는 지역 공무원·경찰·정치인 이름들이 오르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해당 재개발구역 내 입주·분양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는 등 거론되는 인물들은 팔찌 뛰고 있지만 온갖 의혹들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관련 혐의를 파악하는 한편,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굴삭기 사고 방지 조치 등 없어 현대산업개발 안전 의식 '삼류'

노동청, 학동 붕괴사고 현장 감독 49건 위반사항 적발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해당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청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붕괴 사고와 관련한 미흡한 안전조치 뿐 아니라 폭염에 대비한 노동자 휴게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HDC 현대산업개발의 '삼류' 안전 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1일 붕괴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을 실시, 4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같은 위반 사항을 토대로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 재하도급 업체인 백솔건설 등 3개 법인을 각각 입건하는 한편, 해당 업체 현장소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건물 철거작업 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한 현

장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는 게 노동청 설명이다. 특별감독결과,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한 철거 작업 시 굴삭기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굴삭기 사고 방지를 위한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 붕괴방지, 도로폭 유지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건축물 582개소에 대한 철거작업 시 549개소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노동청 감독 결과다. 광주노동청은 또 5개월 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고 지난해 하반기 소음·진동 등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등 5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노동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휴게시설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드러나 권고 조치했다. 노동청은 49건의 위반사항 중 38건의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며 경미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활 속 안전 수칙 잘 지킵시다. 광주 남구체육회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21일 오전 남구다목적체육관 앞마당에서 안전수칙 준수 결의대회를 열고 체육진흥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동킥보드 탈 때 안전모 쓰세요

광주경찰, 본격 단속

2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 앞.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5·18 민주광장 일대를 휩 지나쳤다. 지난달부터 법 개정으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도, 경찰이 단속을 유예하면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동 킥보드 안전 운행을 위한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다. 광주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대한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계도 기간 중 가장 많이 적발됐던 안전모 미착용(56.9%) 사례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헬멧 없이 10분에 1500원 정도인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자칫 2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가 별도로 헬멧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단

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승차정원을 초과해 탑승하면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광주경찰이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에 적발한 인도 주행 사례도 23.4%에 달했다. 광주 도심에는 지난해 2개 업체 2000여대 수준이었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7개 업체 5000여대로 증가하면서, PM 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6월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례를 감안, 안전 운행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앙분리대 설치 국도서 사망 사고 낸 40대 무죄 선고

40대 운전자 자신의 승용차로 국도를 지나다 80대 노인을 들이받았다. 노인은 다음날 숨졌다. 법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데다,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도 있어 보행자가 통행할 것으로 예상, 대비하기 어려웠을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해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밤 9시경 충북 영동군 국도를 지나다 도로변에 있던 B(8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